

## 동북아 에너지 협력 논의의 쟁점과 분석틀: 국제정치경제학적 의제 설정을 중심으로\*

이 제 송 | 고려대 국제학부

최근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관한 국내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동 연구주제가 가지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분석한다. 문헌 연구는 개별국가/양자관계 및 다자관계의 기준으로 기존 연구들을 분류하였다. 비교적 단기간 동안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많은 연구들에서 이론적인 불명확성과 연구 포커스의 중첩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에너지 협력 사업들이 현재 진행중인 상태로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밀한 학술적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와, 일련의 정책연구에서 종종 나타났던 바와 같이 당위성에 기반하여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서 기인한 바 크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이슈가 가지는 성격 자체, 그리고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쟁점 구도가 형성된다. 정치적 요소 대 경제적 요소, 경쟁 대 협력, 그리고 동맹의 재편이라는 구도는 이러한 쟁점의 성격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동북아에너지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틀로서 협력의 주체, 의제, 범위, 방식, 연계 및 이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연구 주제를 제안함으로써 국제정치경제학(IPE)의 의제로서의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 가지는 의미를 재규정한다.

**주제어:** 동북아, 에너지, 양자협력, 다자협력, 국제정치경제, 의제설정

\* 본 연구는 2005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I. 서론

2000년대 초반 이후 나타난 고유가의 지속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왔다. 중동 정세의 악화에 따른 국제원유시장의 불안정성, 중국의 에너지 수요 급증 등의 요인에 기인한 세계적 차원의 수요-공급 불일치 현상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한국, 중국, 일본 등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들은 모두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냉전 종식 이후 거대 에너지 생산 및 수출국으로 부상한 러시아의 위상은 한층 강화되었다(Manning 2000a; 2000b).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는 향후 5년~10년 내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 내 석유 수급의 불균형이 동북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Chang 2003; IEA 2000; Doh 2003; Zweig 2005).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2010년 이후 역내 수급 불균형이 급속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동북아시아에서 역내 국가간의 에너지 확보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IEA 2002).

에너지 안보에의 위협 요인들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에 있어서 에너지 협력에 대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요인을 제공해 왔다. 이에 따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수급 및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관계된 구체적인 사례들 및 추진 주체와 형식에 대한 합의는 정형화되지 않고 있다. 협력의 당사자들이 국가가 될 것인지, 민간기업이 될 것인지의 주체 설정의 문제에서부터 양자, 다자 관계의 다양한 제도적 틀과 형식들, 그리고 어떠한 이슈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제 설정 역시 아직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문제 제기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주요 쟁점들을 고찰하고, 이를 보다 진전된 국제정치경제학적 의제 설정(agenda-setting)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분석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기존 연구들에

대한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를 중심으로 하는 비평논문(review article)으로 기획되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문헌지도(literature map) 작성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은 특정한 사례에 대한 가설의 설정 및 검증보다는 메타-이론적인 관점에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국제정치경제학적 연구 가이드라인의 형성에 맞춰져 있다. 제2장에서는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출간된 학술연구 및 주요 정책연구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논의 동향을 고찰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학술지 검색을 위해 KISS(<http://kiss.kstudy.com>)와 DBPIA(<http://www.dbpia.co.kr>)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고, 2000년 이후 발간된 자료들을 일차적인 분석대상으로 하였다.<sup>1)</sup> 정책보고서는 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세종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간자료를 검색하였다.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국제정치경제학 분야에서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들 정책보고서 중에서도 단행본 및 완결된 구조를 지니는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특히 학술적 연구가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sup>2)</sup> 기존의 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은 연구주제별 분류를 통해 크게 개별국가 및 양자협력, 그리고 다자 및 지역협력의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개별국가 및 양자협력의 차원에서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주된 분류대상으로 한다. 다자협력의 차원에서는 동북아 에너지 수급 현황을 다룬 일반 연구들과 제도 형성 및 지정학적 구도를 다룬 연구들을 나누어 분석한다. 나아가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가 가지는 한계 및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주요 쟁점구도를 설명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의 쟁점 및 대립구도는 크게 경제적 및 정치적 접근, 협력과 경쟁의 대립구도, 그리고 동맹의

---

1)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두 개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였고 에너지와 관계된 다양한 검색어와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주요 학술지에 대한 검색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연구결과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지 않은 일부 자료 중에서 기타 검색엔진 및 오프라인 검색을 통해 일반학술지에서도 일련의 관련자료들이 발견되었고 본 연구에 선택적으로 반영되었다.

2) 학술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분야에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중복이 있는 경우 이들 정책연구기관 보고서는 문헌분석에서 생략하였다.

재편과 안보적 함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향후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연구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분석틀 및 의제설정의 차원에서 논의한다.

## II.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논의 동향

### 1. 개별국가 및 양자협력의 차원

#### 1) 공급원으로서의 러시아의 부상과 동북아에의 함의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러시아의 위상은 에너지 수급 경쟁이 심화되면서 크게 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러시아 내부적 차원의 에너지 산업 및 영향력 증대를 다룬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종만(2006)은 에너지를 통한 러시아의 강대국 복귀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아울러 후진국형 대외무역 구조와 경제마인드의 부족이라는 한계도 함께 지적한다. 김연규(2000)는 외부지대이론의 틀을 바탕으로 90년대 에너지와 러시아 정치를 분석한다. 이성규·권원순(2003/2004)은 1998년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구조의 재편과정에 있어서 석유와 가스 산업의 비중 확대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예의 영향을 분석한다. 김인성(2005) 및 홍성원(2005)은 유코스 사태를 중심으로 석유재벌(oligarchy)을 중심으로 형성된 러시아 석유 및 에너지 산업의 변화 및 재편과정을 고찰하며, 에너지 산업을 매개로 한 푸틴의 개혁 정책이 정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용현(2006) 역시 푸틴2기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재국유화 경향을 지적하며 국가우위적 경향과 이에 따른 권력구조의 고착을 논의한다.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과 시베리아 개발을 다룬 연구로는 이용권(2006), 권원순·민충기(2006)를 들 수 있다. 이용권(2006)은 러시아 동북아 전략 변화의 요인 및 과정을 고찰하고 최근 에너지 차원에서의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논의한다. 푸틴 정부는 “이 지역에서 증폭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감과, 중국과 일본의 경쟁관계를 시베리아의 에너지 자원과 연계하여 시베리아 개발을 유도하고 역내 균형자로서 한 축을 담당하는 전략 구상을 실천”하고 있다(이용권 2006, 312). 시베리아 개발은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산업자본을

축적하고, 지역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한편 나아가 동북아 전략을 실천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이용권 2006, 317). 권원순·민충기(2006)는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의 수출 및 수송체계의 분석을 통해 시베리아 자원개발의 문제점과 지역정책을 논의한다.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의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한국의 에너지 전략과 연계시킨 연구로서는 황윤섭·김형식(2005), 강봉구·한구현(2004)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동북아 및 글로벌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공급원으로서 러시아의 에너지가 가지는 중요성을 분석하고 대러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정한구(2004)도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석유자원의 확보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에너지 안보를 논의한다. 정책연구 차원에서는 러시아 동북아 지역 석유수출시장 확대에 따른 동시베리아 석유자원 도입 전략을 연구한 양의석(2006b), 러시아 에너지 개발 여건 및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대러 진출 전략을 연구한 이성규(2006a) 등을 들 수 있다.<sup>3)</sup>

러시아의 동북아 지역협력을 다룬 연구로는 장덕준(2004; 2006)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극동러시아의 가스전과 석유 파이프라인 개발사업이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을 주된 수요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이제까지 독점적인 공급자인 러시아와 주요 소비국인 동북아 국가간의 쌍무협상을 넘어선 다자적인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간 협력이 있어서 러시아 및 여타 참여국들의 입장이 상이하며, 여러 정치적, 제도적인 장애요인이 존재함으로 양자 및 다자협력의 틀이 병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러시아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정치·안보적 상황을 다룬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우평균(2005)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둘러싼 일·중 간의 경쟁을 다루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앙가르스크 유전의 파이프라인 노선(다칭/나훗카)을 놓고 경합을 벌여왔고, 러시아는 이러한 양국의 각축 속에서 중국과 일본 모두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김경순(2003)은 시베리아, 극동 에너지 개발과 지역안보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한다. 경제협력과 안보의 상호관계에

---

3) 정책연구에서는 다수의 연구물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학술적 업적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일부만 발췌하여 논의한다.

있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안보와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자유주의적 시각과 이러한 자동적인 인과관계에 의문을 나타내는 현실주의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두 시각을 조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동 연구는 이르쿠츠크 및 사할린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극동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안보에 가지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분석한다. 윤익중·이용권(2005)은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의 해결을 통해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을 새로이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이 과정에 있어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을 논의한다. 이성규(2006b)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의 현황 및 미국의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의 대러 및 대동북아 에너지 전략을 고찰하며 미국의 동시베리아 및 극동에너지 참여 구상을 논의한다.

이용권·이성규(2006)는 중·러 양자관계의 큰 틀 속에서 중심적인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에너지 협력을 고찰한다. 동 연구는 중·러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으로 중국의 에너지자원 수급 확보 및 수송노선의 안전성 보장, 그리고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에너지 개발을 통한 장기적인 성장전략의 추진을 지적하고, 협력의 충분성으로는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과 수출능력을 제시한다. 동 연구는 나아가 세계전략 차원 및 단일패권 반대의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통적인 이해가 존재하며 에너지가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의 효과적인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병인(2006)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에 있어서 기반시설, 수요, 종합적 수익, 충분한 사업성 분속이 기초적인 조건을 필요함을 지적하고, 중·러 에너지 협력은 중국의 수요와 러시아의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 2) 거대 수요국으로서의 중국의 대두

최근 동북아 에너지 안보 관련 연구의 또 하나의 큰 축을 이루는 것은 중국의 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른 동북아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중국의 에너지 수급현황을 다룬 연구는 학계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sup>4)</sup> 문영석·나인강(2002)은 중국 원유수입 급증에 따른 과급효과를, 김시중

4) 1990년대 중반에 발표된 이태환(1994)은 중국이 석유 수입국으로 전환한 1993년을 포함한 초기 단계의 중국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다룬 바 있다.

(2005)은 중국의 에너지 부족현상의 향후 영향을, 그리고 임형철(2007)은 중국의 에너지자원 확보전략과 그 영향을 논의한다. 김현진(2003; 2004)은 중국의 에너지 급증에 따른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의 에너지 수급 위기 가능성을 타진한다. 남궁영(2007)은 세계적 수급 차원에 비추어 중국의 에너지 수급현황, 정책 및 에너지 외교를 고찰한다.

전가림(2004; 2005)은 동북아 에너지 현황에 있어 중국에 의해 파생되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국가-지역-국제 차원의 중국의 에너지 전략과 외교정책을 고찰한다. 전가림(2006)은 중국 에너지 외교의 특징을 정상외교를 통한 실리적 자원확보 전략, 능동적인 외교로의 전환, '안보적 경직성과 특수성'이 전제된 팽창주의의 세 가지로 정의한다(전가림 2006, 783). 특히 제4기 지도부로의 교체를 통해 중국은 민간-정부의 동반진출과 다자적 성과의 축적을 바탕으로 팽창주의적 외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 외교 측면의 분석으로는 주재우(2003; 2006)를 들 수 있다. 주재우(2003)는 에너지 확보를 위한 중국의 대내외 정책의 조정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변화는 내부적 정책기조를 강화하는 한편 안보적 이슈로서의 대외에너지 전략을 가능하게 하였다. 중국은 석유 수급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중동외교 뿐 아니라 새로운 공급원으로서 대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중앙아시아(육로), 동남아시아(해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주재우(2006)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에너지 협력 외교를 양자적 차원(중동, 러시아, 베네주엘라, 중동 등)과 다자적 차원(중-아프리카 포럼, 중-아랍 협력 포럼, 상해협력기구, ASEAN)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동북아 협력을 다룬 주재우(2004)는 국가안보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의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 지역 에너지 협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한다. 동 연구는 중국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 다자주의 인식의 증진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여러 한계와 장애요인이 공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윤석준(2005)은 안보적 관점에서 중국에너지 안보와 해군력 발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특히 중국은 에너지의 해양수송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동함대 건설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존의 장거리 해상수송로 보호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해외석유확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전략적 강화 요인이 되고 있다. 심경욱(2005)은 이라크전 이후 동북아 에너지 안보환경을 다루면서 중국과 일본의 에너

지 확보를 둘러싼 경쟁을 고찰하며, 한국의 보다 전략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특히 동 연구는 말라카 해협 및 인도양의 수송안보와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이 즉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데 비해 한국은 이에 대한 전략적인 인식이 부족함을 지적한다.

### 3) 북한 에너지 문제와 남북에너지 협력

북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분석대상으로서의 북한 에너지의 자료 접근 및 실태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연구여건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의 에너지적 차원의 접근으로는 이수훈(2003)을 들 수 있다. 동 연구는 90년대 북한에너지 위기의 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경제난과 에너지난, 그리고 핵 위기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며, 해결방법에 있어 한국, 인접국, 그리고 동북아의 각기 다른 틀 하에서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sup>5)</sup> 양의석(2004)은 북한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재원 확충방안을 논의하고, 정우진(2004)은 북한의 광물자원 공급구조와 남북한 자원 협력 확대방안을, 그리고 정우진(2006)은 대북 전력지원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정우진·임재규(2004)는 남북에너지 교류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김경술(2006a)은 북한에너지 부문의 제도적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집단 분석 및 교육훈련 방안을, 김경술(2006b)은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합에너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그리고 김경술(2005)은 한반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류지철(2002)은 대북에너지 협력 진출과 국제적 공조방안을 논의하면서 에너지 문제의 탈정치화를 통한 시장경제체제 기반 조성, 호혜성의 원칙, 그리고 다자적 참여를 통한 북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참여 기제 마련을 주된 정책 목표로 제시한다.

5) 일반학술지 및 비학술지 부문에서는 북한 에너지에 관한 논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제외하였다.



## 2. 다자 및 지역차원의 접근

### 1) 동북아의 에너지 수급 분석

동북아 석유산업의 환경 분석을 다룬 것으로는 이준범·장지호(2004)를 들 수 있다. 동 연구는 동북아의 석유산업이 제한적이고 낮은 수준의 자유화 및 개방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수급 및 해양 수송에 있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황윤섭·김형식(2005)은 고유가에 의한 한국에의 충격과 동북아 지역의 수급 문제를 설명하며 대내적으로는 소비의 효율화, 대외적으로는 대체공급원으로서의 러시아에 중점을 둔 전략 수립을 주장한다. 백훈(2006a)은 동북아 지역의 석유물류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기존 싱가포르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석유물류 중심지에 한국이 새로운 거점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최식인(2004)은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의 인과성을 방법론적으로 고찰하며 동아시아 경제 성장과 에너지 정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김명남(2003)은 과학기술정책의 차원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협력을 설명한다.

정책연구의 차원에서 인남식(2006)은 동북아 에너지 수급요인을 분석한다. 개별 프로젝트 수준에서 이달석(2004)은 동북아 송유관 연결의 타당성을, 문영석(2006)은 사할린 광구개발 참여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소진영(2006)은 동북아의 전략석유 공동비축의 편익분석을 시도하고 있고, 김윤경(2004)은 동북아 원자력 산업현황 및 역내 방사성 폐기물 처리 협력방안을, 양의석(2006a)은 원자력 산업의 중국 진출방안을 논의한다. 양의석(2006c)은 한중일 에너지 효율개선에 따른 경제적 편익분석을 다루고 있다.

### 2) 제도적 형성의 모색

동북아 협력에 있어 다자주의 협력의 적용가능성을 다룬 연구로는 김형국·백훈(2007)을 들 수 있다. 동 연구에서는 다자주의 협력의 단계를 법제화, 조화, 네트워크연계 및 내부에너지시장으로 나누고, EU, ASEAN, OLADE(남미), NAEWG(북미)의 사례를 비교분석한다.<sup>6)</sup>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 연구는 성공

---

6) 김형국·백훈(2005), 백훈(2006)은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자적 에너지 협력의 사례를 분석하고, 동북아로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한다.

적인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비단 에너지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넓은 의미의 지역 협력의 구도 하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상하이협력기구(SCO), ASEAN, ASEAN+3 등의 지역다자협력기구를 통해 “다자주의적이면서도 지역적인 관점”(김형국 외 2007, 148)에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차원의 다자주의 지역협력 추진의 미비는 에너지 협력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동북아 개별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략 및 협력 연구는 연구기관에서 진행된 정책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sup>7)</sup> 이원우(2002)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 추진전략에 있어서 가능한 분야 및 이의 타당성 조사를 시도한다. 류지철(2003)은 다자간 에너지 협력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있어 기본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고, 박용덕(2004a)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의 구성 및 운영 메커니즘을 다자간 협력 및 WTO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백훈(2004)은 역내 국가에 대한 다자·양자간 에너지 협력 조화를, 심상렬(2006)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로드맵 구축에 따른 단계별 세부실행계획을 다루고 있다. 이근(2003), 이재승(2003)은 외교적 관점에서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재승(2004a)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재승(2004b)은 에너지와 환경 관련 사업들을 동북아 협력의 ‘선도프로젝트’로 추진함으로써 에너지협력과 지역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ASEAN+3를 통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활성화 방안은 임재규(2004)에서 논의되었다. 에너지현장조약(ECT)의 동북아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은영(2004)은 동북아 에너지 조약안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박용덕(2004b)은 ECT 에너지 협력체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북아 협력의 경쟁과 협력 구도를 다룬 연구로는 이재승(2005a; 2005b), 오경택(2006), 박홍영(2006)이 대표적이다. 이재승(2005a)은 동북아 에너지 문제를 상위정치와 하위정치의 2개의 차원이 혼재되어 있는 이슈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경쟁구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재승(2005b)는 지정학의 차원에서 양자관계와 다자관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

7)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제도적 차원에 대한 연구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2000년대 중반 다수의 정책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협력이 기본적으로 협력보다는 경쟁의 상황임을 지적하고, 상이한 국가간 입장의 차이를 조율할 제도적 장치의 결여로 인한 협력의 구심력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오경택(2006)은 역내 수급불균형 및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해 동북아 에너지 관계가 경쟁의 환경에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안정된 국제정치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어 공통의 이익이 존재하는 만큼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 공동비축, 러시아 자원개발, 해로 안정성,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박홍영(2006)은 수요와 공급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중동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요국의 다변화 의지가 강한 만큼 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중-러, 중-일 간에 에너지 갈등의 양상이 여러 이슈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지리학 적 관점에서의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다룬 최병두(2006)의 연구는 정치생태학과 정치경제학의 이론적인 틀을 통해 '공간'의 역동성과 에너지 '흐름'의 공간재편을 논의한다. 동북아에는 탈취, 축적, 권력과 같은 경제적 논리와 영토적 논리간의 모순이 존재하고 이는 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동 연구는 에너지 자원의 공동개발과 배분을 위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동북아의 지역성을 창출할 것을 주장한다.

### 3. 기존 논의의 평가

동북아 에너지 협력 논의가 2000년대 중반에 주로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수의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출간되어왔고, 이를 통해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관심의 수준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2004년 이후 빠른 속도로 연구결과가 수적으로 증대되어가는 추세도 볼 수 있다. 연구의 양적인 측면에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문제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주요한 어젠다로 이미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다루는 기존 연구들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이들 문제점들은 개별 연구 차원에서 발견된다기보다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들이다.<sup>8)</sup> 첫째는 현재 진행 중인 이슈를 다루는 데

8) 본 절에서는 특정 개별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집단적인 차원에서 기존 연구들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있어서 엄밀한 분석 및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러시아 극동 개발 프로젝트, 사할린 프로젝트 등 주요 사례들이 현재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고 추진주체나 일정에 있어 상당부분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및 개발 당사국인 러시아의 정책변화 자체가 일련의 연구들에 있어서 연구주제가 되고는 있으나, 정책환경의 변화를 추적하고 기술하는 수준을 넘어서 체계적인 분석틀의 적용이나 통계적인 처리를 시도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sup>9)</sup>

둘째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다루는 데 있어 당위론적인 접근방식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낙관론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경우, 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동북아 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을 논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많은 장애요인을 지닌다. 에너지 협력을 당위적인 목표로 삼고 이의 유용성과 이에 따른 추진전략만을 논의하기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국제정치경제학에서 학술적인 가치를 가지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이론적 불명확성을 들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관계된 많은 주제들이 엄밀한 검증을 거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에도 기인하지만, 체계적인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이를 접목시키는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에너지 협력의 단계분석을 시도한 김형국·백훈(2007), 상위정치와 하위정치의 개념분석 및 적용을 시도한 이재승(2005a) 등이 이러한 연구사례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제정치 또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이론적 틀, 예를 들자면 현실주의, 자유주의, 중상주의, 구성주의 시각이라든지, 이익집단 및 산업분야별 접근(sectoral approach), 시장-국가관계 등의 이론적인 시각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있고, 이는 향후 이 분야 연구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주요한 연구과제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주제의 중첩을 들 수 있다. 아직까지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 소수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이들 사례들의 진행기간이 매우 짧았던 까닭에 다수의 연구가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9) 이러한 과학적 분석틀의 적용은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의 가변성이 없거나, 변화의 수준이 예측 또는 통제가능한 사례에 적용이 가능하다.

것은 초기 단계의 동북아 에너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로 앞 절에서 분석한 개별 국가,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분석에서 상당수의 연구들은 유사한 구조와 사례, 그리고 유사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또한 특정 이론이나 방법론을 통해 차별화되기보다는 기술적인(descriptive) 차원에서 해당 이슈들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는 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일본의 참여 및 입장에 대한 국내연구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단독 학술연구에서는 거의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적 연구 부문에서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0)</sup> 일본이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향후 보다 활발한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 III.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주요 쟁점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몇 가지의 쟁점구도가 형성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쟁점구도를 1) 정치적 요소 대 경제적 요소, 2) 협력 대 경쟁 요소, 3) 동맹의 재편과 안보적 요소로 나누어 고찰한다.

#### 1. 정치적 요소 대 경제적 요소

정치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간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이슈가 가지는 성격 자체에서 시발된다. 에너지 협력은 산업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관계로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출발하게 된다. 프로젝트의 수익성, 에너지 수급상의 경쟁관계, 아시아 프리미엄, 생산물분배협정(PSA), 공동개발 및 관리, 가스 및 석유 파이프라인 설치 및 관리, 원자력 발전 및 핵 폐기물 관리,<sup>11)</sup>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는 모두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들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경제·산업의 안정된 성장을 위한 수급 확보에 중점이 두어

10) 일본 핵 에너지를 다룬 김지연(2002)은, 국내적, 국제적 환경에서 핵연료 리사이클링을 포함한 핵 능력을 평가하고 지역안보에의 영향력을 논의한다.

11) 핵 개발 및 폐기물 관리의 일부 이슈들은 정치적 요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큰 틀에서 원자력 발전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으로 취급하였다.

져 있다. 경제학적 접근 방법을 채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라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동북아 에너지 문제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성격도 지니게 된다. 에너지 자원의 외교무기화, 자원국유화 정책, 에너지 안보 문제(수송로 안전보장 포함), 자원개발과 관련한 영토분쟁 등은 이러한 정치적 요소에 해당된다. 순수한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는 정치적 추진력과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상위정치적 요소들의 뒷받침이 있을 때 에너지협력과 같은 하위정치적 협력이 용이하게 된다.<sup>12)</sup> 또한 정치적 요소는 에너지 수급 안정 자체를 중시하는 '목적'으로서의 에너지 협력을 넘어 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또 다른 정치·경제적 목표를 이루려는 '수단'으로서의 에너지 협력을 상징할 경우 더욱 가시화된다(이재승 2005a; 2005b).<sup>13)</sup>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많은 부분은 단순한 경제적인 성격을 넘어서 정치적, 안보적으로 민감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점에서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안보 논의는 그 특성 상 정부주도의 성격을 띠게 되며 이슈 자체도 정치화되어 있다. 에너지 자원의 공급을 거의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및 중국의 경우 에너지 안보 대응체계가 대외의존적이며, 중동의 석유생산, 미국의 전략 비축 원유의 방출이나 외교적 상황변화 등 외부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Salameh 2003).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수출국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러시아 역시 에너지 관련 대내, 대외 정책이 뚜렷이 정부주도의 경향을 보이고, 이러한 정부우위의 재편과정 속에서 정치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적, 지정학적 접근방법은 거시적 관점에서 동북아의 국제관계가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를 밝히는데 기여하게 된다(Jaffe 2001).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 가지는 패러독스는 경제적 이익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정

12) 유럽의 석탄철강공동체(ECSC)의 경우 단순히 에너지 협력이라는 하위정치적 접근에서 형성·발전되었다기보다는 이를 통한 역내 경제적·군사적 안정 도모와 독일의 유럽통합과정에서의 참여, 프랑스의 영향력 확보라는 여러 차원의 상위정치적 요소가 반영되었다(이재승 2005a).

13) 한국 및 인접국들의 대북 에너지 지원 등의 협력은 에너지 협력 그 자체로서도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정치·안보적 목적이 근간에 깔려 있다.

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에너지 협력이 일정부분 자율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원활한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참여국들의 정치적 추진력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이재승 2005b).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요인의 대립과 병존은 국제정치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보다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 2. 경쟁 대 협력

동북아는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지역적 인접성이 만들어내는 협력적 조건과 더불어 상호경쟁과 갈등의 요소가 동시에 수반되는 양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다룬 다수의 연구들도 이러한 경쟁적 상황에 기반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북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협력보다는 경쟁이 용이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에너지 부족국인 관계로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의 기제를 도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중국이 공격적으로 에너지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 역시 기존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에너지 도입선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경쟁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에너지협력의 기제가 직접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크지 않을 수 있다(Calder 2004, 2006; 이재승 2005b).

탈냉전 시기 이후의 동북아의 국제정세변화와 전세계적 추세인 지역협력을 고려했을 때 동북아의 에너지 협력과 갈등구도는 하나의 단순한 틀이 아니라 사안별, 상황별로 전략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이재승 2005b). 따라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연구에 있어서는 경쟁 상황에서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 조건 및 의제설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는 보다 국제정치학적인 관점에서 국제협력 및 레짐 형성을 위한 이론적 틀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수단으로서의 에너지 협력과 목적으로서의 에너지 협력의 문제도 경쟁 대 협력 구도에서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해 양자 및 다자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고, 양자관계를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협력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사례에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sup>14)</sup> 나아가 이러한 매개체로서의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 실제로 경쟁적 관계를 협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비교사례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동맹의 재편과 동북아 안보

에너지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 간의 경쟁과 협력구도는 동맹의 재편을 가져오는 한편 동북아 안보환경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다루는 국제정치학 부문의 상당수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냉전 시기 동안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동북아 국가들 간의 연계는 중국-러시아-(북한), 그리고 한국-일본-미국으로 연결되는 대립구도였다. 이러한 냉전구도는 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에 들어서며 개별국가들이 각기 자신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쟁구도로 변환되었고 이는 곧 전세계적인 지역화의 추세에 따라 전략적 연계로 재편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동북아의 에너지원을 둘러싼 전략적 연계는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연계를 대부분 탈피하여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이재승 2005b, 134).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협력 및 동맹 구도는 협력 프로젝트의 성격, 각국의 정치적 입장, 수익성 등에 따라서 다양한 양태를 보일 수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가상 구도는 반드시 하나의 패턴을 따라서 형성되지는 않는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여러 형태의 연계와 경쟁이 중첩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된다(이재승 2005b, 135). 따라서 이 주제는 단순한 동맹의 형성, 재편 뿐만 아니라 동맹의 '강도'와 '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이론 및 분석틀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역내 정치·안보적 갈등 역시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안보적 해석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아직 긴장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우려를 가져온 바 있다. 북방 4개도 반환문제에 따른 일본과 러시아간의 영토분쟁, 파이프라인 노선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간의 갈등 등도 원활한 협력에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역내 국가간 역사적 대립관계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이들 이슈가 부

14) 앞서 논의한 이용권·이성규(2006)의 연구가 이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각되는 것이 원활한 협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이재승 2005b, 134). 안보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협력은 우선 상호이익에 기반한 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상호의존을 강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서 설정된다. 양자 및 다자 안보체제 형성에 있어서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및 에너지 협력이 기여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연구는 국제정치경제학에 있어서 경제-안보의 연계를 설명하는 주요한 연구주제가 된다.

## IV. 동아시아 에너지 협력의 분석틀

### 1. 협력의 주체

에너지 협력에 참여하는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국영기업인지에 따라서 협력의 양태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동북아 국가들 중 일본과 한국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주요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된다. 최근 러시아에서 보여지고 있는 자원산업의 재국유화 경향이라든지, 아직 국영기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 산업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정부간 또는 민간기업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부-민간관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단순한 정부간 협력이나 민간기업간 협력의 구도를 넘어서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 에너지 부문의 민간기업 역시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국영기업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부문에 있어서는 타국의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관계는 하나의 명확한 형태로 정리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주체들의 다양한 특징과 상호 연계, 특히 정부-에너지기업<sup>15)</sup> 관계에 대한 연구

---

15) 여기에는 생산국 및 소비국의 거대 국영에너지 회사의 성격 및 전략에 대한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는 향후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관련된 국제정치경제학의 주요한 어젠다가 된다.

## 2. 협력의 의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 연구 영역의 중첩이 많이 나타났던 이유 중 하나는 협력의 의제 선정이 소수의 개발사업으로 한정된 데 기인한 바 크다. 에너지 관련 의제는 몇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우선 상류부문(upstream)<sup>16)</sup>과 관련된 주제로는 석유 및 가스 개발사업, 파이프라인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국내연구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상류부문의 주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공급원 및 프로젝트를 놓고 기본적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협력을 위한 의제가 개발 및 생산분야로만 국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하류부문(downstream) 부문 및 기후변화대책 관련 부문은 성과가 덜 가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 연구의 주요 의제로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의제로는 공동구매 및 공동비축, 아시아 프리미엄 대처, 대체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절감 및 청정개발체제(CDM), 원자력 폐기물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의제는 생산국과의 에너지 협력인가, 소비국 간의 에너지 협력인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생산국과의 에너지 협력이 기본적으로 상류부문에 치중하게 된다면, 소비국간의 에너지 협력은 상류부문 뿐만 아니라 하류부문에도 많은 비중이 주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경쟁구도에서 협력구도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 3. 협력의 범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범위 설정에 있어서는 지정학적인 불분명성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러시아, 한국, 중국, 일본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참여자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북한, 몽골의 참여 여부는 특히 다자

16) 에너지 산업에서 상류부문(upstream)은 주로 석유와 가스의 개발 및 생산 부문을 지칭하며, 하류부문(downstream)은 정유 및 기타 가공 분야를 의미한다.

에너지 협력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 정부간 협의체'는 이들 국가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sup>17)</sup> 협력의 범위를 보다 넓게 잡았을 경우 ASEAN과의 협력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및 일본은 ASEAN과의 에너지 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미국의 참여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미국은 동북아 국가는 아니지만 역내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적, 정치적 연계를 지니는 높은 수준의 이해당사자로 존재하고 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범위 설정의 다양화를 통해 연구의 대상 및 접근이 보다 세분화될 수 있다.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다차원의 의미를 지닌다. 현재 북한과 관련된 에너지 이슈는 크게 핵개발 문제, 경수로 건설 문제, 파이프라인 통과 문제, 그리고 에너지 부족에서 야기되는 경제위기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경제상황 및 대외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전반적인 진행에 있어서 북한 정부나 기업이 가지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문제는 에너지 협력 뿐만 아니라 동북아 협력의 전반적인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며, 특히 북한과 가장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니는 한국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증폭되어 작용한다(이재승 2005b, 136). 북한이 계속해서 고립되어 있을 경우 한국은 에너지 연계에 있어 마치 섬과 같이 대륙과 유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에너지 협력의 추진은 장기적으로 한국 및 인접국들의 경제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북핵문제의 해결은 환경 및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북한의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안보적 차원에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의 북한의 참여는 평화체제 구축 및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Harrison 2002/2003).<sup>18)</sup>

#### 4. 협력의 방식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방식은 양자적 접근 및 다자적 접근에 모두 기반하고 있

17)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이 기구에의 공식적인 참여를 유보하고 있다.

18)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진전은 북한으로 하여금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특히 북한의 핵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관리를 군사안보 차원이 아닌 에너지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정치적 비용을 낮출 수 있게 한다.

다. 일차적으로 역내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 및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양자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양자협력 틀의 모색은 특히 중동에서 비롯된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면서 동북아의 대체공급원으로서의 러시아의 위상이 강화된 것과 긴밀히 관련된다.

다자기구의 활용은 새로운 기구의 창출(동북아 에너지 기구) 또는 기존의 협력 기구들(ASEAN+3, ARF, APEC, ASEM, 6자대화)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두 연구 대상으로 의미를 가진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역내 경제 협력체도 에너지 협력과 연계성을 가진다. 또한 북핵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 및 post-6자회담 체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차원에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연계될 수 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양자협력과 다자협력간의 연계도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양자간 협력에서 다루게 되는 의제와 다자간 협력에서 다루는 의제 간에는 상호 중첩되는 요소와 독자적인 요소가 있으며, 이러한 의제 설정에 대한 분류 및 연구 역시 앞에서 논의한 다양한 분석 기준에 의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5. 협력의 연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중장기적으로 확대 및 심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동북아의 전반적인 정치·경제협력과 연계되어 추진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협력의 확대 및 연계 논의는 지역협력과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고찰될 수 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낙관적 시나리오는 협력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보다 심화된 형태의 제도화를 거쳐 에너지 공동체 형태로 이행되는 '확대'의 과정과 이와 병행되는 여타 동북아 지역협력과의 '연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상정한다. 예를 들어, 앞서 논의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 의제들이 참여국들간 공동의 이해관계(정치, 경제)를 도출함으로써 해당 이슈 별 지역협의체를 발족시키고, 이러한 이슈별 지역협의체가 확산(spillover)됨에 따라 이슈군(cluster) 별 지역협의체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포괄적인 에너지 협의체로 발전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포괄적 협의체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초국가적 집행기구를 갖추는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로 이행된다. 또한 동

북아 에너지 협력이 여타 지역협력체들과 상호의존도를 높여나갈 경우 에너지 협력은 여러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며 역내 경제·정치통합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에너지 협력은 단순한 대화기구로 격하되며 참여국가들은 계속해서 경쟁구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이재승 2005b). 아울러 동북아 협력의 정체는 에너지 협력의 제도적인 진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 협력의 부진, 북한 문제의 잔존 그리고 동북아 협력의 부진은 상호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구도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장애요소로는 비단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역사 해석 및 과거사 청산 등과 같은 정치적, 감정적 요인 등도 들 수 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지역협력의 선순환 구도와 악순환 구도는 단순히 시나리오적인 접근을 넘어서 보다 엄밀한 가설 및 조건의 설정과 이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주제이다.

## 6. 이론적 틀의 모색

제2장의 기존 연구의 평가에서 지적된 동북아 에너지 협력 연구에 있어서 이론적 적용의 미비는 향후 국제정치경제학의 주요 분야로서의 위상을 설정하기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는 문제점이다. 이제까지 에너지 협력과 관계된 본격적인 이론적 접근은 이준범(2005) 등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매우 미진한 편이었다. 이준범(2005)은 에너지 안보의 전반적인 부문을 대상으로 “에너지 수급에 기초한 경제적 설명의 한계를 보완하고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정치경제학적인 분석틀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이준범 2005, 3).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 분배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 등은 에너지 안보에의 일차적인 국제정치경제학적 분석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연구의 축적은 나아가 안보와 경제성장에 있어서 에너지 협력의 의미를 분석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한다.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협력을 추진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협력이 지속되고 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정치학과 국제정치경제학에서 많은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이를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접목시키는 작업은 향후 이 분야의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있어 중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봉구·한구현. 2004. “‘자원 전쟁’ 시대 한국의 에너지안보 전략: 동 시베리아, 극동 지역을 향하여.”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3호. 통권 46호, 29-60.
- 권원순·민충기. 2006. “러시아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시베리아 자원개발.” 『슬라브학보』 21권 1호, 199-222.
- \_\_\_\_\_. 2006. “러시아의 원유, 가스 파이프라이 체계와 시베리아 자원개발.” 『비교경제연구』 13권 1호, 187-225.
- 김경순. 2003. “한, 러 관계의 안보동학: 시베리아, 극동 에너지개발과 지역안보.” 『평화연구』 11집 4호, 147-188.
- 김경술. 2005. “특집: 한반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국토』 289권, 14-23.
- \_\_\_\_\_. 2006a. “북한 에너지부문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6월 30일).
- \_\_\_\_\_. 2006b. “한반도 통합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연구: 석유 산업.” 에너지경제연구원(6월 30일).
- 김명남. 2003.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협력.” 『과학기술정책』 141권, 47-58.
- 김시중. 2005. “중국의 에너지 부족 현상과 파급효과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17집 3호, 51-88.
- 김연규. 2000. “에너지와 러시아 정치: 1992~1998.” 『슬라브학보』 15권 2호, 269-291.
- 김윤경. 2004.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동북아 원자력산업 진출 및 역내 방사성 폐기물 처리 협력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3월 31일).
- 김인성. 2005.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정책과 유코스 사태.” 『동아시아 연구』 10호, 29-54.
- 김지연. 2002. “일본 핵에너지 정책의 이중성에 대한 분석.” 『국제정치논총』 42집 2호, 131-149.
- 김진욱·김정인·박창원. 2005. “동북아국가의 환경, 에너지협력 방안.” 『국제지역연구』 9권 3호, 480-509.
- 김현제. 2004. “동북아 에너지운영 포럼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3월 31일).
- 김현진. 2003. “신 에너지 위기요인과 동북아 에너지협력.”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6월 12일).

- \_\_\_\_\_. 2004. "중국발 에너지 위기 가능성과 에너지 안전 보장."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6월 7일).
- 김형국·백훈. 2005. "에너지협력제도 구상: 동북아와 유럽 사례." 『한국동북아논총』 10권 4호, 433-458.
- \_\_\_\_\_. 2007. "다자주의 에너지협력의 동북아 적용 가능성." 『한국동북아논총』 42집, 143-173.
- 남궁영. 2007. "에너지 안보: 중국의 전략에 대한 분석." 『국제정치연구』 10집 1호, 243-270.
- 류지철. 2002. "대북 에너지협력진출과 국제적 공조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2월 31일).
- \_\_\_\_\_. 2003.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의 제도적 기반 조성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8월 31일).
- 문영석·나인강. 2002a. "중국 원유 수입 급증의 파급 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 문영석. 2006. "사할린 에너지자원 광구개발 참여전략 연구(2)." 에너지경제연구원 (6월 30일).
- 박병인. 2006. "중·러 에너지협력의 조건과 전망: 동북아국가간 에너지협력의 맥락에서." 『중국학연구』 35집, 363-387.
- 박용덕. 2004a.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의 구성 및 운영 매커니즘." 에너지경제연구원 (12월 31일).
- \_\_\_\_\_. 2004b. "에너지 국제협력 및 협상 대응방안 연구: ECT 에너지협력체 적정협력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2월 31일).
- \_\_\_\_\_. 2006. 『동북아 에너지협력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9월).
- 박홍영. 2006. "동북아 에너지문제의 현황과 전망: 협력의 필요성과 갈등요인." 『한국동북아논총』 제38집, 295-315.
- 백 훈. 2003. "동북아지역 에너지 협력체추진 현황과 과제."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11월 18일).
- \_\_\_\_\_. 2004. "동북아 역내 국가에대한 다자 및 양자간 에너지 협력의 조화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3월 31일).
- \_\_\_\_\_. 2006.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시장통합: 유럽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 『비교경제연구』 13권 1호, 101-156.
- \_\_\_\_\_. 2006a. "동북아 석유물류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 『석유』 22권 2호, 24-49.

- 삼성경제연구소. 2004. “중국발 에너지 위기 가능성과 에너지 안전 보장.”
- 서효걸. 2002.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협력: 가능성과 전망(1).” 『극동문제』(5월).
- 소진영. 2006.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동북아 전략석유 공동비축의 편익분석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6월 30일).
- 손성환. 2006.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협력 방안.” 『주요국제문제분석』 32호, 17.
-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2003. “동북아에너지 협력 연구: 동북아에너지 협력체와 국제기구의 협력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 \_\_\_\_\_. 2004.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동북아 역내 국가에 대한 다자 및 양자간 에너지 협력의 조화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3월).
- 심경욱. 2005. “이라크 전쟁 이후 변화하는 동북아 에너지 안보: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경쟁과 우리의 대응.” 『국방연구』 48집 1호, 3-28.
- 심상렬. 2006.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로드맵 구축에 따른 단계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에너지경제연구원(6월 30일).
- 양익석. 2004. “북한 에너지산업 재건 및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12월 31일).
- \_\_\_\_\_. 2006a. “한국 원자력 산업의 대중국 진출방안 연구: 법제도 부문 중심.” 에너지경제연구원(6월 27일).
- \_\_\_\_\_. 2006b. “동북아 에너지협력: 러시아 동북아지역 석유수출 시장 확장과 역내 국가의 동 시베리아 석유자원 도입, 활용 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6월 30일).
- \_\_\_\_\_. 2006c.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한, 중, 일의 에너지효율 개선에 따른 경제적 편익 분석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6월 30일).
- 오경택. 2006.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과 협력.” 『세계지역연구논총』 24집 1호, 155-173.
- 오영일. 2005. “러시아 석유화학 산업의 잠재력 분석.” 『슬라브학보』 20집 2호, 291-316.
- 우평균. 2005.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일본: 중국 간의 경쟁과 한국의 진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3집 2호, 139-163.
- 윤석준. 2005. “중국 에너지 안보와 해군력 발전.” 『중소연구』 통권 106호 29집 2호, 13-55.
- 윤익중. 2005. “동북아시아 에너지안보 패러다임의 형성 가능성: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12권 1호, 60-88.
- 이 근. 2003. 『에너지 문제의 최근 동향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외교안보연구원(3월 13일).
- 이달석. 2004. “동북아 송유관 연결 타당성 검토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3월 31일).



- 이달석. 2006.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중국의 석유시장개방이 동북아 석유제품교역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경제연구원 (6월 30일).
- 이성규 · 권원순. 2004. "러시아 경제성장과 석유, 가스 산업." 『중소연구』 통권 100호 제27집 4호, 155-179.
- \_\_\_\_\_. 2006a. "러시아 에너지개발 여건변화에 따른 대 러시아 진출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12월 31일).
- \_\_\_\_\_. 2006b.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미국의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에너지개발 참여 구상과 동북아 에너지협력." 에너지경제연구원 (6월 30일).
- 이수훈. 2003. "북한 문제의 에너지적 차원." 『현대북한연구』 제6권 1호, 169-197.
- 이영형. 2005. "동북아 에너지 협력구상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국제문제연구』 5권 4호.
- 이용권. 2006a.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 변화와 시베리아 에너지 자원." 『사회과학연구』 14집 2호, 288-322.
- 이용권 · 이성규. 2006b.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발전 심화 요인 분석: 에너지 자원협력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6집 2호, 215-236.
- 이용현. 2005. "푸틴 2기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정치경제학." 『21세기 정치학회보』 15집 3호, 161-180.
- 이원우. 2002.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추진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3월 31일).
- 이은영. 2004. "동북아 에너지조약안 작성을 위한 기반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3월 31일).
- 이재승. 2003.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모색." 『주요국제문제분석』 11호.
- \_\_\_\_\_. 2004a. 『동북아 에너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분석틀의 모색』.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_\_\_\_\_. 2004b.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동북아 공동체 추진 모색: 환경·에너지협력을 중심으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_\_\_\_\_. 2005a. "에너지안보와 동북아 협력: 하위정치 이슈에 대한 상위정치적 접근." 『국제지역연구』 14권 1호, 21-49.
- \_\_\_\_\_. 2005b.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적 고찰." 『석유』 21권 2호(12월), 128-145.
- \_\_\_\_\_. 2005c.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동북아 공동체 추진 모색: 환경·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이준범. 2005.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론적 접근: 에너지 수급의 정치경제." 『국제평화』 2권 1호, 3-31
- 이준범 · 장지호. 2004. "동북아시아에서의 석유산업의 환경 변화 고찰." 『한국동북아

- 논총』 30집, 3-25.
- 이대환. 1994. “중국의 에너지: 석탄 및 석유수급의 현황과 전망.” 『중소연구』 18집 2호, 115-156.
- 인남식. 2006. 『동북아 에너지 수급 위기 요인』.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임재규. 2004. “에너지 국제협력 및 협상 대응방안 연구: ASEAN+3 에너지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12월 31일).
- 장덕준. 2004.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극동 러시아.” 『한국과 국제정치』 20권 1호, 211-237
- \_\_\_\_\_. 2006. “러시아와 동북아 지역협력: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2권 2호, 185-215.
- 전가림. 2004. “중국에 의한 에너지 위기와 동북아협력.” 『신아세아』 11권 4호, 168-196.
- \_\_\_\_\_. 2005. “동북아 에너지 안보와 중국의 에너지외교.” 『국제지역연구』 9권 2호, 436-462.
- \_\_\_\_\_. 2006. “에너지안보를 둘러싼 중국의 팽창주의 외교정책.” 『국제지역연구』 10권 1호, 765-789.
- 정우진. 2004. “북한의 광물자원 공급 구조와 남북한 자원 협력 확대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12월 31일).
- \_\_\_\_\_. 2006. “대북 전략지연 및 협력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12월 31일).
- 정우진·임재규. 2004. “남북한 에너지 교류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12월 31일).
- 정한구. 2004. 『동북아시아 ‘에너지 안보’ 와 러시아: 누가 러시아 석유를 차지할 것인가?』. 세종연구소.
- 주재우. 2003. “21세기 중국의 외교: 에너지외교?” 『대한정치학회보』 11집 2호, 25-43.
- \_\_\_\_\_. 2004. “중국의 에너지정책과 동북아협력문제.” 『국제정치논총』 44집 1호, 211-233.
- 주재우. 2006. “중국의 에너지 협력외교: 정상외교와 다자외교 전략의 시사점.” 『비교문화연구』 10집 1호, 119-141.
- 최병두. 2006. “변화하는 동북아시아 에너지 흐름의 정치경제지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권 4호, 475-495.
- 최식인. 2004.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북방학회논집』 11집, 139-161.
- 한종만. 2006. “에너지를 통한 강대국 러시아의 복귀 가능성과 한계성.” 『한국동북아

- 논총』 41집, 191-213.
- 해외건설협회. 2001. “동북아시아 가스개발 계획과 참여방안: 동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교통부.
- 홍성원. 2005. “러시아 석유산업의 구조 변화와 푸틴 정부의 석유정책.” 『슬라브학보』 20권 2호, 409-430.
- 홍성표. 2006b. “북한의 기습과괴작전 시도 가능성.” 『북한』 통권 418호, 97-111.
- 황윤섭 · 김형식. 2005. “고유가의 영향과 동북아 석유 수요 구조 하에서의 한국의 전략방안: 대체공급원으로서의 러시아를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21권 2호, 121-152.
- Calder, Kent E. 2004. “The Geopolitics of Energy in Northeast Asia.” Reischauer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Sais/Johns Hopkins University(March 16-17).
- \_\_\_\_\_. “China and Japan’s Simmering Rivalry.” *Foreign Affairs* (March/April), 129-139.
- Chang, Felix K. 2003. “Chinese Energy and Asian Security.” *ORBIS: A Journal of World Affairs* 45, No. 2, 211-240.
- Doh, Hyun-Jae. 2003.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spects and Challenges.” *East Asian Review* 15, No. 3 (Autumn), 85-113.
- Harrison, Selig S. 2002/03. “Gas and Geopolitics in Northeast Asia: pipelines, regional stability, and the Korean nuclear crisis.” *World Policy Journal* 19. No. 4 (Winter), 22-36.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00. *China’s Worldwide Quest for Energy Security* (OECD).
- \_\_\_\_\_. 2002. *World Energy Outlook* (OECD)
- Jaffe, Amy Myers. 2001. “The Potential of Energy as a Geopolitical Binding Factor in Asia.” *Post-Soviet Geography and Economics* 42, No. 7(October/November), 491-503.
- Manning, Robert A. 2000a. “The Asian Energy Predicament.” *Survival* (September), 73-88.
- \_\_\_\_\_. 2000b. *The Asian Energy Factor: Myths and Dilemmas of Energy, Security and the Pacific Future*. New York: Palgrave.
- Salameh, Mamdouh G. 2003. “Quest for Middle East Oil: The US versus the Asia-Pacific Region.” *Energy Policy* 31, No. 11, 1085-1091.
- Zweig, David, and Bi Jianhai. 2005. “China’s Global Hunt for Energy.” *Foreign Affairs* 84, No. 5(September/October), 1-7.

**ABSTRACT**

## Issues and Approaches in 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Agenda-Setting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Jae-Seung Lee** | Korea University

As 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received an increased attention, a series of research on this issue have been published in recent years. This study tries to do a literature review on domestic research about 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and analyzes major issues in these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dividual country/bilateral, and multilateral relations were used as criteria to categorize these researches in the literature review section. The volume of research on 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was substantial, considering that the issue itself was a recent one. However, many researchers show the lack of rigorous theoretical framework and the overlap of agenda while insisting the necessity of energy cooperation. There are several contrasting factors in 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stemming from the nature of energy issue itself and geopolitical factors in Northeast Asia. Political interest versus economic interest, cooperation versus competition, and reshuffling of alliance were discussed as major contenting agenda in 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This study suggests more advanced research agenda by setting a more concrete framework in actor, agenda, scope, method, connection, and theory of 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Keywords:** Northeast Asia, energy, bilateral cooperation, multilateral cooperatio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genda-setting